



동남아시아 교두보 확보

(주)삼호유황오리, 동남아시아 200만불 수출 협약 체결

정읍시 고부면 소재 오리고기 전문기업 (주)삼호유황오리(회장 이세종)가 동남아시아에 200만불(한화 23억원) 수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삼호유황오리는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물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UPK캄보디아그룹(한국대표 강동규)과 수출 200만불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호유황오리는 냉동 훈제오리 200만불 상당 40pt 컨테이너 10대분량을 수출하게 됐다. 특히 현지로부터 수출관련 코드를 부여받고 라벨링 표기사항까지 마쳤다. 양측에 따르면 삼호유황오리는 그동안 캄보디아 이온물, 베트남 롯데마

트, 태국의 빅씨마트 등에 샘플을 보내고 한국 냉동 훈제오리를 홍보하여 호평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수출이 진행되지 못했다.

수출 협약 체결은 2년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한국관광공사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삼호유황오리 글로벌마케팅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박효수 씨의 안내로 성사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종 회장은 “앞으로 정읍지역 농축산 제품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수출되어 농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7mm로 슬라이스 · 150g씩 소단량 포장

다향, '1등급 오리로스 150' 공영홈쇼핑 단독 판매

다향은 17일 '1등급 오리로스 150' 세트를 공영홈쇼핑에서 단독 판매했다. 방송은 다향 '1등급 오리로스 150' 20개팩 구성으로 3만9900원이다.

'1등급 오리로스 150' 는 1등급 국내산 오리고기로 만들었으며, 식감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두께인 7mm로 슬라이스한 오리 로스 제품이다. 뼈를 제거한 후 슬라이스 했으며, 150g씩 소단량으로 포장돼 있다. 해동 후 프라이팬에 강불로 5~6분간 구우면 노릇노릇한 오리 구이가 완성되며, 주물럭, 오리탕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더위 피해 줄이기 위해 탄력적 운영

전남도, 여름철 닭·오리 도축장 운영 확대

전라남도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닭·오리고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8월 말까지 가금류 도축장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높은 온도에 취약한 닭·오리의 도축 전 폐사를 막기 위해 도축장 개장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기고 평소보다 늘어날 주말 도축 물량을 감안해 일부 가금류 도축장은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생

산한 식육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등 세균과 잔류 항생제를 검사하고 도축장 위생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게 위해 HACCP 관련 미생물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도축한 가금류는 1억여 마리이며 이 가운데 30%인 3천12만 5천 마리가 성수기인 6~8월에 집중했다.

<노컷뉴스>

펫팸족 겨냥, 반려동물 기력 회복에 도움

반려동물 전용 보양식 3종 출시



편의점 CU가 여름철 반려동물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 전용 보양식을 선보였다. 이번에 CU가 선보이는 반려동물 전용 보양식은 '정성 가득 한그릇 3종'이다. 삼계탕, 오리탕, 북어탕 등 3가지 메뉴가 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도 즐길 수 있다.

닭가슴살, 인삼, 당근 등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원재료가 사용됐다. 삼계탕과 오리탕은 순단백질을 의미하는 조단백질이 전체 성분량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 함량도 0.1% 미만이다. 북어탕 역시 성장기 반려동물의 발육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됐다.

반려동물 전용 보양식은 보관도 쉽게 제작됐다. 파우치 형태의 패키지에 지퍼백이 적용돼 있어 원하는 양만큼 먹게한 뒤 남은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다. CU가 반려동물 전용 보양식을 선보인 것은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이 늘면서 애완용품 및 먹거리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CU가 애완용품 카테고리 매출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당 상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48.7% 올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 신장률인 30.5%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경제〉

축단협,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촉구 기자회견 ‘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에 촉구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이른바 ‘청렴 선물권고안’에 축산생산자단체들이 명절소비 의존도가 큰 축산업을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7월 30일 성명을 내고 권고안 철회와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준해, 민간부문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청렴 선물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농축산물 소비진작을 위해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이같은 대책은 오히려 ‘규제방안’이라며 영동하게 민간영역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면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라도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지난 2017년 설 명절 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4.5%가 감소했다. 엄연히 공직자 적용대상 법률임에도 그 여파가 이 정도”라며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 형식을 빌려 명절 탄력적용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절에 관계없이 농축산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다. 또한, 축단협은 “일부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마치 농축산업계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결국 간담회가 권고안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부패와 반칙 없는 사회조성은 중요하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법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값싼 선물이 돼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신문〉